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신향숙†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근현대 과학 기술사 연구는 그동안 과학 기술 정책, 연구자, 연구 기관, 제도화 등 다양한 측면을 조명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과학 기술사 연구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국의 사례에 대한 과학 기술 사회학적 연구가 본격화되고 과학 기술자 공동체, 황우석 사태, 과학 기술 논쟁 등을 다루면서 과학 기술 정책 상의 변화를 일부 고찰한 바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시대를 주로 다루고 있다.¹ 결과적으로 박정희 시대 이후에서 1990년대 이전의 과학 기술 및 과학 기술 정책사 연구는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한국 현대 과학 기술 정책사에서 박정희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분명하지만 박정희 이후 여러 차례 정권이 교체되면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학 기술 정책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박정희 시대에 과학 기술 정책 기반과 제도가 구축되었고, 이 때 형성된 제도, 기관, 정책 기조 등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이에 대한 구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noonbucher77@naver.com

1 이영희, “한국 과학 기술 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제와 사회』 100 (2013), 251-272.

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드물다.² 박정희 시대 이후 등장한 제5공화국 정부는 박정희 시대의 이러한 과학 기술 정책의 유산들을 어떻게 발전 혹은 변화시켰을까?

정치학계에서 역대 대통령의 과학 기술 리더십을 분석하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과학 기술 리더십을 비교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두환의 리더십을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에 기반한 정책 명령자로 분류하면서도, 박정희의 과학 기술 정책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전두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³ 하지만 정치학계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대통령의 과학 기술 리더십 유형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는 특정 분야의 산업화나 기술 능력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김건은 한국에서 기술 능력의 발전 과정을 “기업 내 기술 혁신”의 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추진 시기와 1980년대 이후 사이에 산업 기술 정책의 기본 성격에 단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시기는 한국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에 대한 명시적 지원 제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맹아기였다면, 1980년대에는 기업 주도 혁신 체제로의 이행과 기업 내 혁신 체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분석했다.⁴ 송성수는 삼성 반도체와 포항 제철을 사례로 한국 산업의 기술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여, 산업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었다.⁵ 문만용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1980년대 초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맞아 어떻게 재편성되어갔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⁶ 신향숙은 1980년대 유전 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어떻게 등장하

2 문만용, “박정희 시대의 과학 기술 정책”,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연구자와 체험자의 대화』 (선인, 2007), 360.

3 함성득, “한국 대통령의 과학 기술 리더십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6:1 (2012), 141-173; 윤종성, “역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2015), 207-234.

4 김건, “1980년대 한국의 기술 능력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 송성수,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에 나타난 특징 분석: 포스코와 삼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4:1 (2012), 109-139.

6 Manyong Moon, “Understanding Compressed Growth of Science and Technology

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언론, 정책, 법률, 연구소, 대학, 기업 부설 연구소의 영역별 변화를 통해 설명했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분야의 산업화나 기술 능력의 발전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제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 전반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제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주로 『과학 기술 30년사』 『과학 기술 40년사』, 『한국 과학 기술 정책 50년의 발자취』, 『과학 기술 행정 20년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 하지만 이러한 연구 역시 10년 단위의 인위적인 시기 구분에 따른 과학 기술 정책의 추진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서술자가 달랐기 때문에 각 연대별 비교 서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과학 기술 정책이 이후 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제5공화국만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이 시기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왜 추진되었는지, 더 나아가 정말로 그러한 특징들이 1980년대에 형성되었는지조차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제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이 실제 1980년대 한국 과학 기술 정책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추진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과의 유사점이나 연속성보다는 차이점과 새로움을 강조했다.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서 과학 기술처가 보고한 “기술 주

in South Korea: Focusing on Public Research Institutes,”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7:2 (2015), 431-453; Man Yong Moon, “Technology Gap, Research Institutes, and the Contract Research System: The Rol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Korean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33:2 (2011), 301-316; 문만용, “1980년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재편성”, 『한국과학사학회지』 31:2 (2009), 505-543.

7 신향숙, 「1980년대 한국에서 유전공학의 등장과 제도화」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 『과학 기술 행정 20년사』 (과학 기술처, 1987); 『한국 과학 기술 정책 50년의 발자취』 (STEPI, 1997); 『과학 기술 30년사』 (과학 기술처, 1997), 『과학 기술 40년사』 (과학 기술부, 2008).

도의 새 시대 전개—80년대 기술 혁신의 과제와 대책”에서 70년대는 “저임 노동력, 외국 자본, 단순 모방의 외국 기술을 토대로 하여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70년대의 모방과 조립에 기반한 노동 집약 산업과 기능 집약 산업에서 탈피하여 80년대에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기술 집약 산업과 두뇌 집약 산업의 단계로 도약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하고, 이것이 제5공화국이 추진하는 과학 기술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⁹ 『과학 기술 행정 20년사』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 정책이 1980년을 고비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 우위 정책이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을 위해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¹⁰

이처럼 5공화국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과학 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다른 혹은 이전의 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임을 강조했다. 5공화국 정부 뿐 아니라 이후의 연구자들도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했다. 현원복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정책은 1980년을 고비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¹¹ 『한국 과학 기술 정책 50년의 발자취』 역시 “8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설명하고, 그 새로움의 핵심을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서 찾았다.¹² 정말 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은 이전에는 없던 혹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었을까?

이 연구는 19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과학 기술 정책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에서 어떻게 계승 혹은 변화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1980년대 제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정책 기조와 ‘기술 진흥 확대 회의’라는 정책 추진 체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은

9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C14M09456), “기술 주도의 새 시대 전개: 80년대 기술 혁신의 과제와 대책”, (과학 기술처, 1982. 1). 이 보고서에서는 66-76년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술 기여도를 선진국의 경우는 22-3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노동(40%), 자본(22%), 기타(31%), 기술(7%)라고 분석했다.

10 과학 기술처, 『과학 기술 행정 20년사』 (1987), 32-34.

11 현원복, 『1980년대 과학 기술 정책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 재단, 1986).

12 과학 기술 정책 관리 연구소, 『한국 과학 기술 정책 50년의 발자취』 (1997), 206.

박정희 시대의 그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박정희 시대 과학 기술 정책의 변화

박정희는 군정을 포함하면 1961년부터 1979년까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과학 기술 정책은 단일하게 전개되지 않았고 시기에 따라 중요도와 강조점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문만용은 박정희의 과학 기술 담화 분석을 통해 박정희 시기 동안 총 다섯 번의 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먼저, 1960년대 초반의 과학 기술은 기술 교육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와의 관련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 안보 문제를 통해 국방과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통해 과학 기술이 생활 원리의 차원으로 격상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두뇌 산업 시대를 위한 과학 두뇌 양성이 강조되면서 민간 기업이 과학 기술의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¹³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 과학 기술의 역사는 1960년대와 70년대로 나누어 십 년 단위로 서술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 1960년대 박정희 시대를 김근배는 “과학 기술의 현대적 정착”을 이룩한 시기로, 문만용은 “현대적 과학 기술 체제가 형성”된 시기로 평가한다.¹⁴ 1960년대는 경제 발전 초창기로 과학 기술 정책은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존재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과학 기술 정책은 수출 증대를 위해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 박정희 시대는 중화학 공업화와 함께 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된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개발 촉진법(1972)과 기술 용역 육성법(1973)의 제정을 비롯해 각종 산업별 정부 출연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추진했다. 이 시기 과학 기술 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

13 문만용,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 기술 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34:1 (2012), 83-84.

14 김근배, “과학 기술 입국의 해부도: 1960년대 과학 기술 지형”, 『역사비평』 86 (2008년 겨울), 236-261; 문만용, “1960년대 ‘과학 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 기술 체제의 형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9:1 (2007), 67-96.

인 산업별 출연 연구소는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정부는 여기에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 시기에도 기술 개발이 강조되었지만 과학 기술 정책의 초점은 기술의 자체 개발이 아닌 여전히 외국 기술의 도입과 도입한 기술의 소화 및 개량에 맞춰져 있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중반까지 박정희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은 정부 주도로 기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개량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것이었다.¹⁵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의 과학 기술 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외국 기술의 도입에서 기술 개발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고, 과학 기술이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그것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정치적 주목과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의 모색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7년은 그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 1977년은 1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해로, 과학 기술사뿐만 아니라 경제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해이다. 먼저, 한국 경제에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1973년 박정희가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통해 제시한 선진화 전략의 목표였다. 따라서 수출 100억 달러의 목표 달성은 몇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한국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타국과 몇몇하게 겨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 한국의 수출 지원 체계 및 정책이 실효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세계에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의 수출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⁶

1977년부터 추진된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과학 기술 정책에 있어서 이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이전에는 과학 기술 진흥 5개년 계획이 제2차(1967-71)와 제3차(1972-76)에 걸쳐 추진되다가 제4차부터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인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이하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으로 약칭)으로 추진되었다. 이전의 계획들은 경제 기획원이 기획

15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각 시대별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과학 기술 40년사』, 37-99 참조.

16 “100억달러 수출 달성(1977)”, <국가 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7301> (2015. 10. 15 접속)

하고 추진했지만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은 과학 기술처의 과학 기술 실무 계획만이 대신했다.¹⁷ 그리고 이전의 계획들이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낙후성에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은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에 대해 중진국의 상위권으로서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체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은 “성장·능률·균형의 이념 하에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 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켜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¹⁸ 즉, 이전의 과학 기술 계획이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은 기술 혁신 자체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과학 기술 진흥 5개년 계획의 정책 범위가 인력 개발, 기술 협력, 과학 기술 진흥 등 3-4가지에 불과했던 데 비해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은 정책 범위의 세분화와 함께 새로운 분야를 추가해 11개 분야로 크게 확대되었다. 과학 기술 진흥 체제의 정비, 과학 기술 인력의 개발, 기술 도입의 촉진, 기술 용역의 육성, 두뇌 산업의 육성과 장기적 대형 연구 개발의 추진,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원자력 기술 개발, 자원 개발과 환경 보전 및 기상 업무의 강화, 정보 산업의 육성, 국제 기술 협력의 증진, 과학 기술 풍토 조성 등이 그것이다.¹⁹

이처럼 100억 달러 수출 달성과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과학 기술 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변화의 첫 번째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서 나타났다. 즉, 과학 기술이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국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7년 2월 8일 박정희의 과학 기술처 연두 순시 자리에서 최형섭 과학 기술처 장관은 “과학 기술이 경제 성장을 적극 선도하는 능동적

17 과학 기술 실무 계획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송성수는 과학 기술처 종합 계획관이 작성한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의 머리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여 주신 관계 전문가와 당사자 제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이 계획이 과학 기술처의 종합 계획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송성수, 『과학 기술 종합 계획에 관한 내용 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 2005), 61.

18 과학 기술 실무 계획만,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 (과학 기술처, 1976).

19 송성수, 『과학 기술 종합 계획에 관한 내용 분석: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60; 과학 기술 실무 계획만,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 (과학 기술처, 1976).

인 역할을 담당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금년부터 과학 기술 부문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국민 총생산의 0.5% 수준인 연구 개발 투자를 81년에는 1%선 이상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보고했다.²⁰ 1977년 『과학 기술 연감』에서는 “경제 및 과학 기술의 발전 진로에 입각하여 앞으로 우리의 과학 기술은 그간 축적하여 온 개발 능력을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의 경제 개발을 위한 지원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위치에 서서 경제 성장을 적극 선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서술했다.²¹ 이듬해 『과학 기술 연감』에서도 “과학 기술은 어제까지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그 동안 구축하여 온 과학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을 본격으로 개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적극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과학 기술의 변화된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밝혔다.²²

이처럼 최형섭의 보고와 『과학 기술 연감』의 서술은 과학 기술이 경제 발전을 보조 혹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선도 및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환된 인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 기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맞물려 기술 개발과 민간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기존의 과학 기술 정책이 외국 기술의 도입과 도입한 기술의 소화와 개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후에는 도입이 아닌 기술의 자체 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배경은 앞서 언급한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목표의 달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은 국제 수지를 크게 개선시켰지만,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 누려온 경공업 및 노동 집약 산업 중심의 수출이 한계에 달했고, 선진 공업국들과의 기술 경쟁 또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 의식은 과학 기술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부각시켰으며, 과학 기술 정책의 초점을 기술 도입이 아닌 기술 개발로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술 개발에 대한 강조는 연구 개발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먼저, 1977년 『과학 기술 연감』에는 기술 자립 시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산업계 스스로 기술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 체제로 점차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1978년 『과학 기술 연감』에는 과학 기

20 “기술 집약 산업 적극육성”, 『매일경제』, 1977. 2. 8.

21 『과학 기술 연감』 (과학 기술처, 1977), 3.

22 『과학 기술 연감』 (과학 기술처, 1978), 6.

술 개발 체제를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 기술 개발 투자의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을 1981년 50:50을 기준으로 1991년에는 40: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하기도 했다.²³ 박정희도 1978년의 연두 기자 회견을 통해 과학 기술의 혁신과 민간 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과학 기술의 혁신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기계, 전자, 화학 분야 등에 걸쳐서 10개의 공공 전문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 연구소는 앞으로 기업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산업 구조도 점점 더 복잡하고 또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기술 수요도 고급,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연구 기관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기업도 자체 연구소를 설립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으며, 연구 개발의 1차적 책임은 민간 기업 자체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제부터는 우리 민간 기업에 있어서도 자체 기술 연구 개발 활동을 개시할 때가 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²⁴

기술 개발과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에 대한 정부의 강조는 조세 및 금융 상의 지원을 비롯해 기술 개발 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²⁵ 그 중에서도 기술 개발 촉진법의 개정은 ‘국산 신기술 제품에 대한 보호’와 ‘산업 기술 연구 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1977년 기술 개발 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산 신기술 제품은 “신기술이나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기술 개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 기술처 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했다. 이 국산 신기술 제품의 제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8조 2항(국산 신기술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보호)을 신설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국산 신기술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업화 시험 완료 단계 또는 시범 제작 단계에서 이를 과학 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그러면 정부는 신고된 국산 신기술 제품의 제조자에 대해 연구 개발에서 기업화 단계까지 투자된 자본의

²³ 『과학 기술 연감』 (과학 기술처, 1977), 9; 『과학 기술 연감』 (과학 기술처, 1978), 8.

²⁴ “1978년 연두 기자 회견”, 대통령 기록관.

²⁵ 기술 개발 촉진법은 “산업 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2년 제정되었다.

회수와 적정 이윤의 확보가 보장되도록 일정 기간 유사 제품의 수입 규제 및 동일 품목의 중복 제조 규제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거나 국산 신기술 제품의 성능·품질 보장에 필요한 개선을 명하거나, 국산 신기술 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우선 구매 등 지원 시책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개발의 주체인 산업 기술 연구 조합의 설립을 위해 제10조 3항(산업 기술 연구 조합의 설립)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동일 또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1)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동종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 (3)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 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을 위한 기술 지도 사업, (5) 기타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 기술 연구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민간 기업 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정부는 법률적인 지원뿐 아니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부는 1978년 9월에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제조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대통령의 지시로 촉구했다. 이후 11월에는 공업 진흥청의 주관으로 민간 연구소 설립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상공부 장관의 명의로 민간 연구소 설립 장려를 위한 공한을 민간 기업체에 발송했다. 이러한 정부의 권유 및 강압적 조치들이 자극이 되어 1979년에는 민간 연구소 설립 추진 협의회(민간 기술 연구소 협회)가 발족했으며, 그해 말까지 총 46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었다.²⁶ 정부의 유도 정책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 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기업 스스로도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시대 말기에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기술 혁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새로운 연구 개발 추진 체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개발에 대한 강조는 연구 개발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정치적 주목과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의 모색으로도 이어졌다. 먼저 197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 정부는 기술 개발을 강조하면서 중화학 공업 분야와 함께 두뇌 산업(brain-intensive industry)에 주목하기

26 『산기협 10년사』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1989), 14-15.

시작했다. 두뇌 산업은 종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협의의 지식 산업이나 정보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밀 화학, 정밀 기계, 정밀 전자, 플랜트 용역 산업, 지식 및 정보 산업 등과 같이 고도의 과학 기술 두뇌가 주축이 된 창조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분야였다. 1977년 『과학 기술 연감』과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에서는 두뇌 집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1) 고급 과학 두뇌의 양성과 기술 인력의 정예화, (2) 우수한 과학 두뇌와 기술 인력의 조직적 활용을 위한 전문 연구 기관 설립, (3) 소프트웨어 개발이 요청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컴퓨터 및 지식 정보 산업 등의 국가적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²⁷ 두뇌 집약 산업은 이듬해 박정희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중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박정희는 “두뇌 집약 산업의 중점 개발로 중화학 공업을 뒷받침”하고 “기술 용역 능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며, “고급 과학 두뇌의 대량 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 과학원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과학 재단을 통해 대학의 기초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⁸

이러한 새로운 두뇌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의 구상도 이어졌다.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책적 중요 연구 개발 사업”, “정부 기업 공동 연구 사업”, “장기적 대형 연구 개발 사업”, “국책적 대형 연구 개발 사업” 등의 명칭을 가진 새로운 연구 개발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국책적 중요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6년 『과학 기술 연감』에서 나타났다.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 및 자주적 연구 개발 활동의 조성을 위해 과학 기술처의 조사 연구 사업을 종전 대학 교수나 연구 기관 등 주로 연구할 사람들로부터 과제를 신청 받아 선정 추진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이 개발을 요구하는 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원칙으로 공동 부담하고 연구는 대학을 위시한 국내 각 전문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이른바 “정부 기업 공동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는 책임 있게 수행토록 하는 이른바 참여와 책임의 자세를 더욱 앙양시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²⁹

27 과학 기술 실무 계획반,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 53; 『과학 기술 연감 1977』, 6.

28 박정희, “197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문”, 1978. 10. 4, 대통령 기록관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04_result.jsp (2015. 10. 15 접속)

29 『과학 기술 연감 1976』 (과학 기술처, 1976), 9.

이처럼 “국책적 중요 연구 개발 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과제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대학과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정부·기업 공동 연구 사업을 의미했지만, 당시로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나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구상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의 구상은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 되었다. 제4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에서 국책적 대형 연구 개발 사업은 “국가적으로 그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원료 중간재 및 기계류의 국산화나 기술 집약적 수출 신제품의 창출과 같이 어느 단위 기업이나 특정 전문 연구 기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과제”를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으로 정의되었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재료, 기계, 전자, 정밀 화학, 화학 공업, 식량 자원, 에너지, 정보 산업 등에 대한 중점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 개발 주체와 연구 분야를 구체화시켰다.³⁰ 이는 1976년 『과학 기술 연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책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에 대한 구상이 정책 추진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된 것은 1978년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가 작성한 『기술 자립에의 도전: KIST 장기 연구 계획 I (1979-83)』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책적 중요 연구 개발 사업을 “장기 대형 연구 과제”로 표현하고 이를 “미래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며, 관련되는 전문 분야와 기술의 종합도, 기술 및 산업 관계상의 파급 효과가 크고 원대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흔히 국가적 차원의 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장기적 계획 및 수행이 요구되며 종합적 연구 관리 제도를 필요로 하는 시급한 연구 개발 과제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 대형 과제의 연구 개발은 “사회 경제의 기술적 요청에 부응하여 연구 기간이 장기간이며, 그 연구 개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연구 과제의 산업화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만 개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 주도 하에 종합 연구소(KIST), 전문 연구소, 학계 및 산업계의 협동 연구 조직의 체계적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³¹ 이어서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산

30 과학 기술 실무 계획반,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 52.

31 『기술 자립에의 도전: KIST 장기연구계획 I (1979-83)』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 1978),

업 구조 개편, 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 및 자원 위기 극복, 합리적 시스템 개발, 공해 방지 등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소재 국산화 및 공정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에너지 및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기술 개발, 환경 보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종합적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기술 및 두뇌 집약형 특화 산업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종합적 연구 등을 선정했다.³² 장기 대형 과제 추진의 효과로는 경제적 기대 효과 외에 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 강화, 연구 개발 체제의 정비 등을 통한 국내 연구 개발 활동의 급속한 진흥 등을 꼽았다.

이처럼 1977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 즉, 과학 기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두뇌 산업의 육성, 장기적 대형 연구 개발의 추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 기술 10개년 계획』에 대한 준비로 이어졌다.³³ 『과학 기술 10개년 계획』은 기술 집약적인 고도 산업 국가 건설을 위한 개발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고급 두뇌의 양성을 비롯한 분야별 산업 기술 개발 전략 등을 포함될 예정이었다. 과학 기술처는 이를 위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활동 및 정책을 분석한 『과학 기술 장기 계획 (자료 I)』을 작성하는 등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³⁴ 그러나 『과학 기술 10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도에 폐기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중화학 공업 부문의 발전도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

72.

32 과제 선정 기준은 가) 국가 산업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산업 공해 방지, 국민의 위생 및 보건 증진, 사회 안전 개발, 생산 활동과 직결된 사회 개발 등을 위해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기술, 나) 기술 및 산업 구조상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크며 특히 중화학 공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 다) 특화 산업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라) 전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마) 많은 연구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익 동기의 결여 등으로 민간 기업이 시도할 수 없는 기술(방위 산업 등), 바) 종합 연구소, 학계 특성화 연구소 및 산업계의 협동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술, 사) 기술의 부의 효과(adverse impact)를 줄이는 기술, 마) 국제 수준에 달하는 고급 기술 등이었다.

33 “과거적 보고 과학 기술 10개년 계획 마련”, 『경향신문』, 1979. 2. 8.

34 이 자료는 공식 출판물이 아니라 정부 내부 문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투자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투자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집중되고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의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과학 기술 장기 계획 (자료 I)』 (과학 기술처, 1979).

나라 제4차 과학 기술 계획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러한 새로운 구상들이 실현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중화학 공업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산업 구조적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의 반작용으로 경공업 부문의 발전이 지체되었고, 중화학 공업 부문의 발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1970년대 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³⁵ 여기에 1979년의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국제 수지 악화,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수입량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³⁶ 뿐만 아니라 1978-79년의 노풍(魯豊) 피해³⁷와 백수 현상³⁸에 이어 1980년에는 냉해까지 겹치면서 농업 생산량이 25.7%나 감소했다. 광공업도 전반적인 국내 수요 부진으로 1.2%가 감소하고,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부문 역시 2.2% 감소하는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1980년에는 국민 총생산이 전년 대비 5.5% 감소해, 한국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³⁹ 새로운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다른 이유로는 과학 기술 정책 추진 체제의 핵심이자 강력한 지도자였던 박정희의 사망을 비롯해 각종 시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산업·사회·정치적 문제로 인해 박정희 정부 말기에 추진되었던 일련의 새로운 과학 기술 정책은 계획이나 구상에 그치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35 『한국 과학 기술 정책 50년의 발자취』, 203; 『과학 기술 40년사』, 90.

36 당시 경제 상황은 『경제 백서』와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 전망』 (한국 개발연구원, 1982) 등을 참고.

37 정부가 적극 권장했던 새로운 다수확 벼 품종이었던 노풍을 파종했다가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38 벼 이삭이 하얀 쪽정이가 되는 현상으로 당시 태풍의 여파로 경남, 전남북, 제주 등에서 발생했다.

39 『경제 백서 1981』 (경제 기획원, 1981), 57-75.

3. 제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기초, 기술 드라이브 정책

1980년대는 선진 국가를 향한 정부의 오랜 약속의 시대이자 변화를 예고했던 시대로 한국의 산업사 및 과학 기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았던 시대였다. 1960년대 초에 본격적인 산업 개발 정책과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정부는 “1980년대 선진 공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과학 기술처가 설립 직후 수립한 한국 최초의 과학 기술 장기 계획인 『과학 기술 개발 장기 종합 계획, 1967-1986』에서 1980년대는 “과학 기술이 근대화되고 복지화된 사회”이자 “기술 자립기” 혹은 “선진 과학 기술 달성기”로 표현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60년대 공업화의 기반 구축 단계”, “1970년대 도약 최종 단계”, “1980년대 성숙된 대량 생산 단계”를 거쳐 1980년대 후반에는 “성숙의 지력이 축적된 중진 공업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⁴⁰ 비슷한 시기의 『과학 기술 연감』에서도 『과학 기술 개발 장기 종합 계획, 1967-1986』에서 제시한 경제적 전망에 사회적 전망을 추가해 “1960년대 전통 사회에서 탈피”, “1970년대 발전의 변혁 과정”, “1980년대 근대화·복지화”라는 구도의 전망을 제시했다.⁴¹ 이처럼 1980년대는 경제 및 과학 기술 장기 계획을 일차적으로 완수하는 시점이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시대로 기대되었지만, 그럼에도 1980년대 초 한국의 실제 상황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었다.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전환기에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 정부는 경제 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그 방안을 과학 기술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제5공화국 정부는 집권 과정에서 정권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입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맥을 이으면서도 보다 확실한 상징 정치가 필요했다.⁴² 과학 기술은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후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뛰어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전두환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집권 과정에서 생긴 민주적 정당성의

40 『과학 기술 개발 장기 종합 계획, 1967-1986』 (과학 기술처, 1968), 15.

41 『과학 기술 연감 1969』 (과학 기술처, 1969), 6.

42 상징 정치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킴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부 정책에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병걸·성지은, “과학 기술과 상징 정치: 참여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9:1 (2005), 29-31.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 박정희가 수시로 연구소를 찾아 연구원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을 본받아 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과학 기술 리더십을 발휘하려 했다.⁴³ 따라서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였다.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기술 우위 정책’, ‘기술 주도 정책’, ‘기술 약진 전략’ 등으로 불리며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하 제5차 5개년 계획)의 발표를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먼저, “기술 드라이브”라는 용어가 언론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은 1981년 9월로서 제5차 5개년 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였다.⁴⁴ 제5차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에 대한 토론을 담당했던 한국 과학 기술원 산업 경제 연구부장 이종욱은 “기술 개발이 여러 곳에서 지적 또는 강조되었다 할지라도 제5차 5개년 계획 또한 기술 개발이 산업 정책 나아가 경제 정책의 주류로 인식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기술이 현재 한국 산업과 경제의 장애 요소이고 계획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과거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버금가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구상하여 각종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계획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⁵

이후 1981년 10월 과학 기술처가 발표한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 1982-1986』(이하 제5차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에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부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단지 보고서의 서문 격인 “제5차 과학 기술 5개년 실천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정부와 산업계, 과학 기술계, 학계가 혼

43 현원복, 『대통령과 과학 기술』 (과학사랑, 2005), 179.

44 현원복은 ‘기술 드라이브’라는 말이 1981년 10월 3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술 드라이브로 제2 도약 꽃피우자”라는 사설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과학 기술처가 이것을 받아 기술 우위 정책을 기술 드라이브라고 사용하기 시작해 제1차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통해 전두환 정부의 정책 기조로 공식화되었다고 주장했다(『대통령과 과학 기술』, 205).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이보다 앞서 1981년 9월 2일 『동아일보』의 “‘안정 복지’의 기대 5년: 5차 경제 계획 부문별 점검 <6> 과학·기술”이라는 기사에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일주일 뒤인 9월 9일의 『경향신문』의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사용했다.

45 “‘안정 복지’의 기대 5년: 5차 경제 계획 부문별 점검 <6> 과학·기술”, 『동아일보』, 1981. 9. 2; “전문가의 의견”, 『경향신문』, 1981. 9. 9.

연일체가 되어 제5공화국의 범국가적 기술 드라이브 정책 의지 구현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이었다. 보고서의 본문에서도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현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⁴⁶ 이는 기술 드라이브나 기술 진흥 확대 회의가 낫설지 않은, 즉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도 통용될 수 있는 용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술 드라이브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였으며, 어떻게 구체적인 정의나 설명 없이도 통용될 수 있었을까?

이는 앞서 언급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버금가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표현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듯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착안해 만들어진 용어였다. 수출 드라이브가 수출을 강조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 각종 지원 및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듯이 기술 드라이브는 기술을 강조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각종 지원 및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의미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1970년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10월 13일 『한국경제신문』은 창간을 기념한 사설 “기술 드라이브로 제2 도약 꽃피우자”에서 1970년대의 고도 성장이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단순 노동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상품의 대량 수출, 해외 시장의 호황, 값싼 석유 에너지와 자원 등에 기댄 외형적·양적 증대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건이 사라진 1980년대는 수출 드라이브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수출 드라이브를 대신하여 1980년대의 제2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1970년대의 제1도약을 가능케 했던 수출 드라이브 대신에 80년대의 제2 도약을 위해 기술 드라이브를 제창한다고 밝혔다.⁴⁷ 이는 기술 드라이브가 수출 드라이브의 연장이 아니며, 수출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기술 드라이브가 수출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으로 등장했든, 아니면 그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했든 간에 기술 드라이브와 수출 드라이브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수출

46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 1982-1986』 (과학 기술처, 1981).

47 “기술 드라이브로 제2 도약 꽃피우자”, 『한국경제신문』, 1981. 10. 13.

보고의 핵심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80년대의 새 시대를 기술 주도 및 기술 혁신으로 이룩하자는 것이었다.⁴⁸

이 보고는 기술 혁신과 제2의 도약, 국제 기술 동향과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기술 혁신을 위한 과제와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기술 혁신의 애로 요인으로 연구 개발 능력과 고도 인력의 부족, 기술 축적과 기술 정보의 빈약, 과학 교육과 국민적 기술 기반의 취약, 기술 개발 동기 유발의 환경 미비, 기술 외적 성장 추구의 기업 경영 자세 등을 꼽았다. 이어서 이러한 애로 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직접적인 정책 과제로는 연구 개발의 활성화,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 기술 인력의 양성, 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 등을, 간접적인 정책 과제로는 기술 개발 금융·세제의 보강, 발명 특허 및 표준 제도의 확립, 정부 구매 가격 제도의 개선, 경쟁 원리의 확산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혁신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산업계는 전 산업 기술 혁신 운동의 자율적인 확산을, 정부는 기술 개발 우위의 정책 구현을 추구하여 80년대의 제2 도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를 접한 전두환은 “앞으로 정부의 모든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이나 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술 및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술 우위의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지시함으로써 기술 드라이브 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⁴⁹ 전두환 대통령이 기술 드라이브를 위해 각 부처별로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술 드라이브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별 지시 사항

관계부처별	역할
경제 기획원	과학 기술 투자의 확대와 기술 우위의 경제 및 산업 정책 발전
재무부	금융·세제 상의 기술 개발 지원 시책의 확대
상공부	산업 육성 시책과 지원 자금 배정에 있어서 기술 개발 우선

48 과학 기술처, “기술 주도의 새 시대 전개: 80년대 기술 혁신의 과제와 대책”, 국가 기록원 (관리번호: C14M09456), 1982.

49 과학 기술처 기술 진흥국 기술 진흥과,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 대통령 각하 당부 말씀(안)” (국가 기록원, 관리번호: BA0074044) 1982.

문교부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 교육의 일신을 위한 장기 대책의 강구
노동부	기술 인력의 숙련화와 기능 준종의 풍토 조성, 산업계의 자율적인 기능 인력 스카웃 안하기 여건 조성
국방부	생산과 직결되는 기능 및 기술 훈련 강화 방안 강구(전 장병의 기술 인력화 추진)
내무·농수산부	새마을 사업의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강 발전(영농의 과학화, 농어촌 생활 환경의 과학화 촉진 등)
문공부	매스컴을 통한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출처: 과학 기술처 기술 진흥국 기술 진흥과,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 대통령 각하 당부 말씀(안)” (국가 기록원, 관리번호: BA0074044) 1982.

전두환의 당부에서 보듯이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전두환 정부의 모든 경제 및 산업 정책의 추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위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단순히 과학 기술처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었다.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통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국가적 의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두환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기술 드라이브를 통한 제2의 경제 도약을 과학 기술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 기술처는 “70년대 수출 드라이브를 통한 경제 발전이 제1의 도약을 이룩했다면, 80년대에는 기술 드라이브를 통해 이를 심화시켜 제2의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국가 목표인 선진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정책 추진의 모토로 삼았다.⁵⁰ 전두환도 각종 연설 등에서 “한 나라의 과학 기술 성패가 곧 국가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힘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힘을 실어주었다.⁵¹

1983년에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기술 약진 전략(技術躍進戰略)이라고 바꿔 부르며 새로운 전략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술 약진 전략을 “지금까지 다져온 우리의 기술 기반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하나씩 차례로 개발해 나가 기보다 핵심 거점 기술을 먼저 집중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 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신제품, 신공정을 개발하는 한편, 생산 현장 기술을 개량·발전시켜

50 『1982년 주요 업무 계획 해설』 (과학 기술처, 1982), 1.

51 “제15회 과학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1982. 4. 21); 민정기, 『전두환 대통령 어록: 영광의 새 역사를 국민과 함께』 (양지사, 1987), 401.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최단 기간 내 선진 대열에 진입코자 하는 기술 개발 기본 전략”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⁵²

이처럼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의 기조로 공식화되었으며, 제5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의 추진으로 구체화되었다. 제5차 과학 기술 부문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첨단 산업 기술 개발”, “산업 고도화”, “공공 기술은 정부 주도, 산업 기술은 기업 주도, 기초 및 응용 연구는 대학 중심으로 추진”, “핵심 전략 기술은 출연 연구소·산업계·학계의 공동 참여형의 국책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 “기업 연구소·대학 부설 연구소 육성 및 활성화” 등이었다.⁵³ 이중에서 첨단 산업 기술의 강조는 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차별화된 모습 중 하나로, 전두환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전두환은 과학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첨단 기술의 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이 경제는 물론 국가 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열쇠임을 강조했다.⁵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치적 주목과 함께 5공화국은 연구 개발의 주체로 대학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산·학·연의 공동 참여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과학 기술 정책 추진 체제와 추진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과학 기술과 산업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구비를 직접 지원한 최초의 국가 연구 개발 사업으로,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과 전략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시일 내에 단축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연구 개발 사업”이었다.⁵⁵ 이는 전두환 정부의 국정 지표였던 “1980년대 제2의 경제 도

⁵² 과학 기술처, “기술 주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C11M04404), 1983.

⁵³ 과학 기술 실무 계획반,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1982-1986)』.

⁵⁴ 첨단 산업 기술 개발은 실제 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두환은 “국제 기능 올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한 만찬시 격려사”(1983. 9. 9), “역대 국제 기능 올림픽 입상 선수들을 위한 만찬시 격려사”(1983. 9. 29), 8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1983. 10. 24), “제15회 과학의 날 기념식 치사”(1982. 4. 21), “8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1982. 10. 4) 등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연설에서 첨단 기술의 육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⁵⁵ 과학 기술부, 『특정 연구 개발 사업 20년사』(2003), 18.

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 기반 구축 사업으로 80년대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 중 하나였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전략은 공공 기술과 산업 기술이라는 기술 사용 대상에 따라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로 구분하고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산업화 연구라는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이 분담하는 것이었다. 기술 사용 대상과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 학계, 산업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은 그동안 정부 출연 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던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을 산업계와 학계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의 연구 개발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연구 개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었다.⁵⁶

이렇듯 5공화국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박정희 시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970년대 중후반 이후 박정희 시대의 변화에 주목하면 박정희 시대 과학 기술 정책의 연속으로 파악할 여지도 충분하다. 기술 드라이브의 핵심인 기술이 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책의 핵심 내용들이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서 민간 역할의 확대와 첨단 기술 개발의 강조, 특정 연구 개발 사업 등은 박정희 시대의 기술 개발 촉진법의 개정, 두뇌 산업, 국책적 대형 연구 개발 사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면 5공화국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박정희 시대의 과학 기술 정책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이런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방식을 덧붙이면서 5공화국의 대표적 과학 기술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갔다.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정부뿐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1980년대 및 제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⁵⁷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1970년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인 1980년대와 제2의 경제 도약을

56 『과학 기술 40년사』, 102-103.

57 “80년대 활로 『기술 드라이브』로”, 『경향신문』, 1981. 10. 29; “과거처 5년 계획: 수출서 기술 주도로”, 『동아일보』, 1981. 10. 29; “기술 드라이브 정책 발전”, 『매일경제』, 1982. 1. 30; “기술 드라이브”, 『동아일보』, 1982. 9. 3 등 관련 기사 다수.

위한 제5화국의 정책 기조로 단순한 과학 기술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이었다. 이러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의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끈 핵심 정책 기구가 기술 진흥 확대 회의였다.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라는 의제를 구체화했던 공간이자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공간이었다.

4.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 추진 체제, 기술 진흥 확대 회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술 진흥 확대 회의 설치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그 중 과우회(科友會)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작성한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 보고서에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설치 배경, 경위, 의의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⁵⁸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 회의의 발상은 어느 한 명의 아이디어라기보다 당시 과학 기술처 행정 관료들의 욕구에서 시작했다. 경제 기획원 출신의 과학 기술처 과장들이 과학 기술처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해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 버금가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설치, 운영을 희망했었다고 한다. 여기에 당시 제5차 경제 계획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의 수립에 참여했던 일부 외부 전문가들까지 동조하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과학 기술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이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김재익 청와대 경제 수석이 있었다.⁵⁹ 이장규의 설명에 따르면 김재익은 전두환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전두환의 강력한 신뢰를 받으며 경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⁶⁰ 그는 경제 학자였지만 과학 기술 진흥에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전두환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⁶¹

58 과학 기술부,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 2006, 131-134.

59 과학 기술처의 조경목 실장과 제5차 경제 계획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의 작성 과정에 참여했던 KAIST의 윤덕용 박사는 김재익의 경기고등학교 동문이자 5공화국 초기 국보위에 파견되었던 전문 위원이었으며, 전경련의 김영우 상무는 김재익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기였다. 과학 기술부,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 132.

60 이장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중앙일보사, 1991), 8.

한편, 1982년 1월 과학 기술처 기술 진흥국 기술 진흥과에서 작성한 “기술 드라이브를 통한 제2 도약에의 길—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라는 정부 문서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개최 배경을 특정인이나 집단의 의견이 아닌 당시 경제적·산업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70년대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제1 도약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이는 외형적, 양적 성장에 의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제2 도약”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 기조 위에 성장 추구, 사회적으로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정치·군사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산업의 기술 혁신을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이유이자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개최하는 의의라고 밝혔다.⁶² 다시 말해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1980년대 제2 도약이라는 새로운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혁신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드러난 것은 1980년 한국 산업 개발 연구소가 작성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로 여기에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와 유사한 “산업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민간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으로 기술 개발 주체의 종합 관리 체계 확립, 과학 기술 정보 교류의 확대, 개발 기술의 활용 체제 확립,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 조세·금융 및 기타 제도의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산업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운영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1960년대에 급속한 수출 신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차원의 수출 관리 행정 체계인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했다. 즉,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통해 전 국민적 수출 의욕이 고취되었고, 수출 업체들의 노력이 집결되었으며, 정부는 수출 증진에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980년대에 고도 산업 사회를 이룩하고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산업 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및 기술직 중

61 김재익은 과학 기술 진흥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그 일환의 하나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진흥 위원회’ 설치를 전두환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정홍식, “김재익 수석과 정보화 정책”, 『80년대 경제 개혁과 김재익 수석』(삼성 경제 연구소, 2003), 120-121.

62 과학 기술처 기술 진흥국 기술 진흥과, “기술 드라이브를 통한 제2 도약에의 길”,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BA0074045), 1982.

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 기술 개발 진흥 확대 회의(가칭)와 같은 최고 행정 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참여 범위는 산업계, 민간 연구소 대표, 학계 및 기술 개발 관련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회의는 우수 개발 기술에 대한 포상과 세미나 등을 행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실적 평가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⁶³ 이외에도 1980년 3월 17일 전경련과 매일경제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월례 토론회 “기술 혁신 시대의 개막”에서 민간 연구소 협회의 허신구 회장은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면서, 연구용 시험 기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와 함께 수출 확대 회의처럼 기술 확대 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⁶⁴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1981년 10월 28일,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과학 기술 부문 실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과학 기술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제5공화국은 기술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과학 기술 입국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매 분기별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운영은 과학 기술처가 맡고, 확대 회의 정부 측 참석 범위를, 김수석은 관계 부처 장관이라고 건의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전 국무 위원이 참석, 국무총리 참석, 우리나라 각계 대표급 인사들이 가급적 많이 참석하고 주요 신문 방송사 책임자들도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⁶⁵

전두환의 지시는 곧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져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 1982-1986』에 반영되었다. 이 보고서는 1980년대 기술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범국가적인 기술 드라이브 정책 의지를 구현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 및 유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 내에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진흥 확대

63 한국 산업 개발 연구소,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 연구』(과학 기술처, 1980. 12. 24), 261-262.

64 “전경련·본사 공동 주최 월례 토론회 기술 혁신 시대의 개막”, 『매일경제』, 1980. 3. 19.

65 과학 기술처 기술 진흥국 기술 진흥과, “기술 드라이브를 통한 제2 도약에의 길”.

회의는 행정부의 전 각료와 산업계, 학계 및 과학 기술계의 대표로 구성하여 매 분기마다 개최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의식을 산업 전반에 확대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참여 주체와 개최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서는 국가 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 대책, 기술 인력의 국제적 양성 대책, 국가 표준 제도의 확립과 시험·검사 기능의 강화, 기술을 통한 소비자 보호 대책 등 주요 시책을 결정하며 기술 개발 성공 사례 및 해외 첨단 기술 동향을 보고하고 기술 개발에 따른 제 문제를 발굴하여 협의·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⁶⁶

이후 과학 기술처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추진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기술 진흥 확대 회의 설치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과학 기술처의 회의 자료에서 밝힌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설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제5공화국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 의지를 구현하고, 둘째는 1980년대 범국가적 기술 개발 체제를 확립하며, 셋째는 기술 개발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기술 혁신을 위한 추진력을 결집하는 것이었다. 과학 기술처는 회의 방식 및 보고 안건 작성에 관한 “기술 진흥 확대 회의 보고 안건 작성 및 운영 준칙”을 만들어 회의 운영을 정형화시켰다. 보고 안건은 안건 보고, 국내외 과학 기술 동향 주요 보고 항목, 기술 성공 사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 중 안건 보고는 기술 혁신 관련 주요 정책, 기술 개발 계획,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주요 외국의 정책 분석 보고 등을 주제로 과학 기술처, 관계 부처, 민간 산업계, 단체 등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민간 산업계, 타 부처, 과학 기술처 순으로 보고 우선 순위까지 지정했다.⁶⁷

안건 보고는 ‘주요 보고’와 ‘특별 보고’로 구성되었으며, 전두환 임기 동안 열린 열두 차례의 회의에서 총 27개의 정책 과제를 다루었다. 주요 보고는 기술 주도의 새 시대 전개,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대책,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제화 전략, 기술 주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기술 집약형 신기술 기업의 태동과 육성대책, 신기술 투자의 활성화와 대책(경제 기획원, 재무부, 과학 기술처), 주요 산업 분야별 기술 개발 동향(전자 공업 진흥회 등 10개 민간 단체), 최근의 기

66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 과학 기술 부문 계획 1982-1986』(과학 기술 실무 기획반, 1981), 32-33.

67 과학 기술처 기술 정책실 기술 진흥 담당관, “기술 진흥 확대 회의 보고 안건 작성 및 운영 준칙”,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DA0059569), 1982.

술 개발 동향과 대응 방향, 중소기업의 기술 집약화 촉진, 2000년대를 향한 과학 기술 발전 장기 계획, 과학 산업의 육성-미래를 향한 선택과 준비 등 기술 진흥 전반의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주로 과학 기술처가 담당했다. 특별 보고는 기업의 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민간 기술 협회), 정밀 화학 공업의 전략 산업화-국책 연구 개발 사업(화학 연구소장), 과학 기술 교육 진흥 방안(문교부), 정보화 시대의 개막(과학 기술처), 해외 산업 기술 정보 수집 및 활용(KIET), 정부 구매 제도 개선 방안(경제 기획원, 과학 기술처), 상호 인증 제도의 확대 방안(공업 진흥청), 품질·성질·효율 위주의 정부 구매 제도 운영(과학 기술처), 2000시대를 향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방안(과학 기술처), 중소기업 기술 집약화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기술 진흥 심의회) 등 구체적인 기술 진흥 시책 등으로 과학 기술처 이외의 관계 부처와 산업체 및 민간 단체가 보고했다.

표 2. 제5공화국의 기술 진흥 확대 회의 개최 실적

년도	회수 (일시)	주요 보고	특별 보고
1982	제1회 (1.29)	● 기술 주도의 새 시대 전개(과학 기술처)	① 기업의 기술 개발 현황과 계획(민간 기술 협회 회장 허신구) ② 성공사례: 삼성전자, 금성전기, (주)이화 ③ 소비자 운동을 통한 품질 향상(소비자 연맹 회장: 정광모)
	제2회 (6.4)	●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대책(과학 기술처)	● 정밀 화학 공업의 전략 산업화-국책 연구 개발 사업(화학 연구소)
	제3회 (10.20)	●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제화 전략(과학 기술처)	● 과학 기술 교육 진흥 방안
1983	제1회 (1.28)	● 기술 주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과학 기술처)	● 정보화 시대의 개막
	제2회 (7.15)	기술 집약형 신기술 기업의 태동과 육성 대책(과학 기술처)	1. 해외 산업 기술 정보 수집 및 활용(KIET) 2. 주요 광물 자원의 활용 기술 개발(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
	제3회 (11.22)	신기술 투자의 활성화 대책(경제 기획원, 재무부, 과학 기술처)	정부 구매 제도 개선 방안(경제 기획원, 과학 기술처) 통신 진흥 시책(체신부)

년도	회수 (일시)	주요 보고	특별 보고
1984	제1회 (2.20)	주요 산업 분야별 기술 개발 동향(전자 공업 진흥회 등 10개 민간 단체)	상호 인증 제도의 확대 방안(공업 진흥청)
	제2회 (11.21)	최근의 기술 개발 동향과 대응 방향(과학 기술처)	품질·성질·효율 위주의 정부 구매 제도 운영(과학 기술처)
1985	제1회 (6.28)	중소 기업의 기술 집약화 촉진(기술 진흥 심의회)	2000시대를 향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방안(과학 기술처) 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 수지 개선 추진(전경련)
	제2회 (12.19)	2000년대를 향한 과학 기술 발전 장기 계획(과학 기술처)	중소 기업 기술 집약화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기술 진흥 심의회)
1986	제1회 (9.5)	2000년대 과학 기술 개발 장기 실천 계획(2000년 장기 계획 추진 위원회)	
1987	제12회 (6.25)	과학 산업의 육성—미래를 향한 선택과 준비(과학 기술처)	민간 산업계의 기술 혁신 방안(경제 단체 공동)

출처: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과학 기술부, 2006), 219-220, [자료 IV-1] 제5공화국의 기술 진흥 확대 회의 개최 실적('82~'87) 재정리.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들의 그 추진 경과는 다음해 회의에서 보고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83년 1월 “기술 주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주제 보고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술 혁신의 추진 현황”이란 소제목으로 지난해에 추진했던 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세제, 금융, 정부 매매 제도,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기술 도입 자유화 추진,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확보의 측면 등에서 살폈다. 먼저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준비금 적립 한도를 소득의 30% 또는 수입금의 1.5%로 확대했고, 기술 및 인력 개발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 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특별 상각률을 50%에서 90%로 인상했다. 금융 면에서는 기술 개발 주식 회사, 산업 은행, 중소기업 은행을 통해 1982년도에는 715억 원을 공급했고, 83년에는 1,345억 원으로 확대시켰다.⁶⁸ 뿐만 아니

⁶⁸ 과학 기술처, “기술 주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C11M04404), 1983.

라 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2년 12월에는 한국 개발 투자 주식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⁶⁹

이처럼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상당수가 제도와 시책에 반영되어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진흥의 성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성과는 연구 개발비의 급속한 증가로 1980년대에는 연간 30%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민간의 비중은 80년에서 36.1%에서 88년까지 78.7%로 증가하여 정부와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었다. 여기에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인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을 비롯해 각종 기술 진흥 기금의 마련이 중요하게 기여했다. 둘째는 민간 연구소의 폭발적인 증가로 1981년에 53개에 불과하던 기업 부설 연구소가 88년에는 604개가 되었다. 민간 연구소의 증가에는 연구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연구용 건물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연구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 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일련의 제도 정비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고급 두뇌의 국제적 양성, 민간 기업의 해외 연수 활성화, 우수 학생 영재 교육 과정의 신설, 연구 중심 대학원 운영 체제 확립 등에 대한 정책들이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통해 입안·추진되었다.⁷⁰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1984년 4월에는 ‘기술 진흥 심의회’를, 이듬해 4월에는 ‘기술 진흥 지역 협의회’를 추가적으로 조직·운영했다. 기술 진흥 심의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술 혁신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기술 진흥 심의회는 기술과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술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 부처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켜 기술 관련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직은 과학 기술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 기획원, 재무부, 국방부, 문교부, 동력 자원부, 건설부, 체신부 등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차관과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한국 과학 기술원장, 한국 개발 연구원장, 산업 연구원장,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등 17명의 상임 위원과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986년부터는 청와대 과학 기술 비서관을 위

69 한국 개발 투자주식 회사는 “정상적인 금융으로는 위험이 높아 자금 공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산업에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대는 회사”로 일종의 벤처 캐피탈 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개발 투자 설립 계기로 본 그 장래 모험 산업의 모험 시동”, 『경향신문』, 1982. 12. 20.

70 과학 기술처, “기술 주도 정책 추진의 현황과 과제”,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C11M04404), 1983.

원장으로 관계부처국장과 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실무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조직하여 심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 및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⁷¹

기술 진흥 심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중요 산업 분야별 기술 수준 및 국내외 기술 동향의 분석과 평가 둘째, 과학 기술 인력 개발, 투자 촉진, 제도의 개선 등 기술 혁신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의 협의와 조정, 셋째 기술 진흥 확대 회의 보고 안건의 심의 및 이행 점검을 포함한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운영지원, 넷째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의 추진 등이었다.⁷² 기술 진흥 심의회의는 1984년 4월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5월, 6월, 8월, 12월 총 5회가 개최되었고, 85년에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로 총 4회가 개최되었다. 86년부터는 실무 위원회와 본회의를 나누어 각각 4회씩 진행했으나 두 회의의 안건에 차이가 없었다. 즉, 본회의는 실무 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을 비준하는 역할로, 그 개최일도 실무 위원회가 실시된 이후 짧게는 5일에서 10일 정도 뒤에 열렸다. 87년에는 실무 위원회의 3회, 본회의 2회가 실시되었는데 6월에 실무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제 3회 실무 위원회가 9월에 개최된 이후 11월에 개최된 본회의는 실무 위원회 안건의 일부가 빠지고 새로운 안건인 “제1회 한국 과학상 시상식 개최 계획(안)”이 포함되기도 했다.⁷³

기술 진흥 심의회가 운영된 지 1년 후에는 기술 진흥 지역 협의회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기술 진흥 지역 협의회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시책과 제도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혁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보급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술 개발 시책에 관한 산업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보다 정확한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었다.⁷⁴ 1985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개최되었고 86년에는 5월에 1번, 11월에 2번 개최되는 등 85-86년 사이에 총 7회 개최되었다. 개최 장소는 구로공단, 구미 공단, 창원 공단, 반월 공단, 이리 수출 공단, 울산(울산·울주공단), 대덕(대전·신안 공단) 등이었고, 참석자는 과학 기술처 장관·차관, 기술 진

71 현원복, 『1980년대 과학 기술 정책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 재단, 1986), 57.

72 과학 기술처, 『과학 기술 행정 20년사』 (과학기술처, 1987), 61.

73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 (과학기술부, 2006), 222-224.

74 과학 기술처, 『과학 기술 행정 20년사』, 61-62.

홍 심의회 실무 위원 및 관계 부처 장관, 입주업체 및 기업인, 지역 언론계, 금융인 등으로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400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보고 안건과 특별 안건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고 안건으로는 기술 개발 시책 현황과 추진 방향(과학 기술처), 산업 기술 정보 이용 안내(산업 연구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안내(한국 기술 개발(주)), 기술 지원 안내(기계(연) 부설 기업 기술 지원 센터) 등이었다. 특별 안건은 중소 기업 간이(簡易) 자동화 촉진 대책(과학 기술처), 전자 통신 분야 기술 지원 안내(전자 통신(연), 기계 분야 기술 지원 안내(기계(연)), 기술 지원 안내(기계(연) 부설 기업 기술 지원 센터) 등이었다.⁷⁵ 이렇게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기술 진흥 심의회와 기술 진흥 지역 협의회와 연계되면서 범국가적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범국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체제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의 구심체였다.⁷⁶ 이후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⁷⁷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면서 축소 및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민주화와 자율화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세웠던 제6공화국은 권위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운영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당시 과학 기술처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권위주의라고 비판을 받았던 전두환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싶어 했으며, 제5공화국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의 상징적 존재였던 대통령 주재 기술 진흥 확대 회의도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이관 과학 기술처 장관이 수차례 청와대 문희갑 경제 수석을 통해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개최를 건의하자, 청와대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좋지만 새 정부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여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과학 기술처는 기

75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 225.

76 1982년 1월 29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 국무 위원, 여야 정치인, 경제계, 학계, 연구계 등을 대표하는 2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의 개최사에서 과학 기술처 장관 이정오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가 “제5공화국의 범국가적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기록원(관리번호: BA0074045),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 경과 보고”, (과학 기술처, 1982. 1).

77 『과학 기술 40년사』, 94.

술 진흥 확대 회의라는 명칭에서 “확대”라는 권위주의적 표현을 삭제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고 방식을 탈피해 경제인, 교수, 언론인, 기타 비과학 기술계 인사들까지 참여시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⁷⁸

또한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시작할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과학계의 비판도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1982년 과총 부회장이었던 조완규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가 명칭부터 회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기술에 초점이 맞춰있어 과학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술 진흥 확대 회의의 목표가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촉구하는 데 있더라도, 이는 기초 과학의 진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술과 과학은 항상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술 정책과 아울러 항상 과학 육성책도 똑같은 무게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술 진흥 확대 회의에 더 폭넓게 대학의 참여를 촉구 혹은 유인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⁹ 이 외에도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관료 조직에서 건의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5공화국 시기에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상임 부회장을 지냈던 김영우는 기술 진흥 확대 회의가 구체적인 정책 의지를 실현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과학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관료 집단의 정책 수립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분석했다.⁸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6공화국은 1989년 6월 27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과학 기술 진흥 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시 개최하기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참여 인원도 대폭 축소되었고 개최 횟수도 1년에 2번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1990년에 종합 과학 기술 심의회를 재활성화하면서 기술 진흥 심의회와 기술 진흥 지역 협의회를 폐지시킨 데 이어, 과학 기술 진흥 회의는 1992년 7월 제5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5. 맺음말

제1차 기술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78 『과학 기술 정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 조사 및 과제 발굴』, 170.

79 조완규, “제1회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보고”, 『과학과 기술』 153 (1982. 3), 14-15.

80 『국가 경쟁력과 과학 기술 전략: 고 김영우 박사 유고 논문집』 (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 1998), 434-435.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는 과학 기술처를 설립하여 과학 기술 관련 행정 제도와 법령을 정비했으며, 1970년대에는 산업 분야별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덕 연구 단지 등을 건설하여 연구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1977년을 기점으로 박정희 시대의 과학 기술 정책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외국 기술의 도입에서 기술 개발로,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선도하는 역할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정치적 주목과 새로운 연구 개발 체제의 모색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1970년대 말 박정희의 사망과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박정희 정부 말기에 구상되었던 일련의 새로운 과학 기술 정책은 계획이나 구상에 그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대 초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시대 혹은 선진국으로 도약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가득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제5공화국은 이전의 정권을 따라 고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확실한 상징 정치가 필요했으며 과학 기술은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분명 박정희 시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수출진흥확대 회의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정책이 차지하는 의미나 역할은 상당히 달랐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단순히 수출입 실적과 경제 성장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정책 목표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역할도 수출 진흥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기술 드라이브 정책의 목표는 기술 개발이나 과학 기술 진흥이 아닌 ‘제2의 도약’ 혹은 ‘선진 복지 국가 건설’이었다. 즉, 5공화국 정부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과학 기술을 최우선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다. 이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이 단순한 과학 기술 정책이 아니라 모든 경제와 산업 정책의 우위에 있는 일종의 국가적 의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 정권이 과학 기술의 위치를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로 변경하려 했다면, 5공화국은 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까지

선도하는 더욱 확장된 역할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공화국에서 과학 기술 정책은 박정희 시대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5공화국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인 기술 드라이브 정책은 과학 기술 처 단독으로 수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문교부, 노동부, 국방부, 내무부, 농수산부, 문공부에 이르기까지 범부처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과학 기술의 위상과 역할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단지 구상이나 계획에 그쳤던 정책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5공화국에서 높아진 과학 기술의 정치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기술 진흥 확대 회의였다. 기술 진흥 확대 회의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는 공간이자, 구체화시키는 통로였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주재하고 국무 위원은 물론 여야 정치인, 경제계, 학계, 연구계 등의 2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국가 최대 규모의 최고 회의였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기술 진흥 확대 회의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 시기 내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부 정책 내에서 과학 기술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공화국 과학 기술의 핵심이자 대표적이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술 드라이브 정책, 기술 진흥 확대 회의, 민간 주도, 첨단 기술, 특정 연구 개발 사업 등은 1980년대에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독창적인 성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들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모습들, 즉 과학 기술 정책의 핵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외국 기술의 도입에서 기술 개발로, 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선도하는 역할로 전환되며, 두뇌 산업 육성과 국책적 대형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이 기획되는 등의 여러 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대 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일부 계승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는 맹목적 답습이 아니라 80년대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의미와 정책적 실천 방법을 추가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

The 5th Republic'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the Transformation of Park Chung Hee's Legacy: The Technology Drive Policy and the Expanded Assembly for Technology Promotion

SHIN Hyang-Su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technology drive policy” is the flagship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mplemented by the 5th Republic during the second stage of the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It hel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should not only support economic growth, but lead the advancement of the economy. Therefore, the technology drive policy was not merely a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it was a national agenda that stood above all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ies.

The Expanded Assembly for Technology Promotion was the 5th Republic’s main council overseeing matter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t was where main issues of the technology drive policy were discussed, and where major policy announcements were made to the public. The President himself presided the council, and cabinet members and politician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associated with the Assembly. The Assembly was composed of approximately 200 individuals representing a diverse array of fields.

This research addresses the contexts and processes behind the creation of the technology drive policy and the Assembly, two elements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f the 1980s. Some aspects widely praised as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5th Republic, such as private-sector leadership, emphasis on high-technology, and selection R&D programs, can be traced back to their roots in the Park Chung Hee era. However, the 5th Republic did not adopt these policies in a passive manner, but adapted them by giving new meanings and creating new roles.

Keywords. The 5th Republic, Park Chung He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echnology drive policy, Expanded Assembly for Technology Promotion